

COP26 실패가 보여 주는 것 체제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관련 기사 8면

사진 출처 : Cameron Strangberg

미·중 정상회담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2면

20대 대선
이재명의 좌우 눈치보기와
폭넓은 대중운동의 필요성

3면

'간병 살인'
자본주의와
계급 불평등이
낳은 비극

4면

대학생이 본
영화 <태일이>
치열한 삶과
희생이 남긴
희망의 메시지

5면

서평 <엄취 선 여성해방>
쉬우면서도 깊이있게
여성해방의 전망을 밝히다

6면

서평 <아이폰을 위해 죽다>
애플과 중국 정부가 만든
'죽음의 공장', 그리고 저항

7면

COP26 실패가
보여 주는 것
체제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8면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준 미·중 정상회담

김영익

11월 16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비록 화상 회답이지만, 바이든이 대통령 이 된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답에서 대만, 무역, 국제 에너지 공급, 기후 위기 등 광범한 의제들을 두고 “전략적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고 끝났다.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 회답에 앞서 미국과 중국 양국은 다양한 쟁점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었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국가 안보를 내세워서 인텔의 중국 내 생산 확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무역 전쟁도 여전하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높여 놓은 대중국 관세를 유지해 왔다.

이번 회답에서 바이든은 “자유롭고, 개방되고, 공정한 국제 시스템”, 즉 기존에 미국이 주도해 온 규칙을 강조했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적 관행”을 문제 삼았다.

지정학적 경쟁 문제도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군사력을 증강할 뿐 아니라, 일본·호주·한국 등 동맹국의 군비 증강도 고무하고 있다. 바이든도 취임 후 공세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 왔고, 그 성과의 하나로 오커스(AUKUS)를 결성했다.

이에 따라 핵무기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장관 자문관을 지낸 벤 잭슨은 《포린 어페어스》에서 “핵무기 강대국들이 광범한 핵무

기 현대화 노력을 진행”하는 점을 우려했다. 바이든이 전임자들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중국이 핵무기를 증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해협

최근 미국과 중국 간에 가장 예민하고 위험한 쟁점은 대만 문제였고, 이번 회답의 최대 관심사였다.

그동안 대만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언사는 점차 강경해졌다. 지난달 바이든은 ‘대만이 공격받으면 방어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럴 책무가 있다” 하고 답했다.

물론 이번 회답 후에 백악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 하거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데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밝혔다.

중국도 대만 문제는 자국의 “핵심 이익”이라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에게 대만 내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번 회답에서도 시진핑은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바이든 앞에서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셈이다.

대만은 지정학적 갈등의 최전선이자, 반도체 국제 생산 사슬에서 핵심적 구실을 하는 곳이다. 이런 점까지 결합되면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증폭될 판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대만과 그 주변에서 우발적 사고가 큰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니얼 러셀도 《포린 어페어스》에서 그 위험을 경고했다. “공세적 무력 시위, 반도체에 대한 접근 문제, 아슬아슬한 정치적

제스처가 혼합돼” 대만에서 당사자들 어느 누구도 쉽사리 중단하기 힘든 대결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양측이 후속 대화에서 충돌을 피할 “가드레일”을 잠정 합의한다고 해도, 평화와 안정을 장기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기후 위기와 팬데믹 등 중요한 국제적 현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양측의 갈등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국가들 간 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려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엄청난 낭비를 낳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원웅

12월 9~10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100여 개국의 정상들을 초청해 가상회의의 방식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연다. 문재인도 초청받았다.

그 회의는 바이든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외 정책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즉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로 포장하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초청국 명단에 따르면, 그 회의에는 의회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유럽 국가들과 한국·일본 등의 주요 동맹국들뿐 아니라 누가봐도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정부들도 초청됐다.

예컨대, 바이든은 중국과 영향력을 다투는 곳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와 필리핀의 강경 우익 정부를 초청했다.

인도의 모디 정권은 무슬림을 겨냥한 폭력을 부추겨 왔고,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실패를 비판한 언론인들, 농업법 개악 반대 운동 활동가들을 ‘선동 금지법’ 등으로 탄압한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정권은 집권하

자마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즉결 처형하는 등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켜 왔다.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극우 정부, 트럼프를 본받아 대선 불복 시위를 조직하고 있는 브라질의 극우 대통령 보우소나루도 그 회의에 초청받았다.

중동의 경우, 페르시아만 연안 왕정 국가들과 이집트 독재 정권 등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누가 봐도 ‘민주주의 회의’에 초청하기에 민망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인들을 학대하는 이스라엘은 초청받았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 박탈을 아예 법으로 명시한 인종 분리주의의 국가이다.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이 민주주의를 선사해 주겠다고 쳐들어가 정부를 세운 국가이다. 이 곳의 정치 체제는 종파 간 갈등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

한편, 그 회의에는 대만도 초청됐다. 대만은 의회제 민주주의의 국가이지만, 미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을 자국하려는

듯하다.

바이든 정부는 그 회의를 통해 “인터넷 자유를 위한 연합”을 출범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러시아의 인터넷 검열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의 초청국 명단에는 올해 프리탑하우스가 중국과 함께 “인터넷 자유 최하위 10개국”의 하나로 꼽은 파키스탄도 포함돼 있다.

이런 참가국들의 면면 때문에 서방 언론들과 NGO들도 이 정상 회의가 과연 민주주의 증진에 얼마나 진지하겠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위선

사실 서방 지배자들의 민주주의 지지는 언제나 모순과 위선으로 점철돼 있었다.

예컨대 미국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문제 삼으면서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에 관해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은 2000년대 초 중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는 동안에는 위구르족 탄압을 눈감아 줬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언제나 자국의 패권 유지에 종속된다.

미국은 패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 대중의 민주주의 열망을 가차없이 짓밟기도 했다. 예컨대, 1973년에 칠레 사회주의자 아옌데 대통령의 죄파 정부를 전복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군부 쿠데타를 지원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이를 이렇게 정당화했다. “이 문제는 칠레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기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다.”

물론 때로는 서방 정치인들이 대중의 민주주의 염원에 지지를 표명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태에 영향을 미치거나 서구식 민주주의로 운동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냉전 시기에 ‘민주주의’ 구호는 미국의 패권을 정당화하고 동맹국들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이었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은 ‘독재 대 민주주의’ 공식(‘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구호와 결합된)을 이용해 패권을 분명히 하려 했다. 2000년대 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한 명분의 하

나도 바로 그곳에 민주주의를 ‘선사’한다는 것이었다.

위기

현재 미국은 그때만큼 득의양양하지는 못하다.

바이든은 ‘어느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면서 이 정상 회의에서 미국 내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조치들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지난해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대선 불복 위협에서 드러난 미국 구내의 정치 위기를 의식한 것이다.

바이든과 서방 지배자들이 국내외에서 느끼는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더 큰 체제 위기(경제, 팬데믹, 기후, 지정학적 경쟁)를 반영한다. 바이든은 이런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극우가 집권한 나라에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다. 소위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꼽히는 서방의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최근 국가 탄압이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경찰력 강화를 추진한 것이 그런 사례다. 바이든과 서방 지배자들 자신도 문제인 것이다.

20대 대선

이재명의 좌우 눈치보기와 폭넓은 대중운동의 필요성

김문성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이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윤석열은 이재명과의 지지율 격차도 늘렸다.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0퍼센트를 넘기도 한다.

국민의힘 경선 종료 후 당내 경쟁 후보들의 표가 대부분 윤석열 지지로 결집한 것이다. 한 달 전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은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현 국면에서 우파는 결집하며 견인력도 발휘하고 있다. 정권 교체 · 심판 정서가 정권 유지 정서와의 격차를 다시 늘리고 있는데, 그 상당수가 국민의힘 지지로 수렴된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9월부터 우파가 퍼붓고 있는 비방 공세도 효과를 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심화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불평등 · 부정의 · 위선에 대한 분노를 속시원히 표현하는 지속적이고 급진적인 대중 운동이 없거나 미약한 것이 진짜 문제다. 바로 이 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에서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는 핵심 비결이다.

2030 청년들의 분노

청년층, 특히 20대 여론조사는 시사적이다. 20~30대는 박근혜 퇴진을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대선에서 문재인과 심상정에게 많이 투표했으며, 다수가 임기 초 문재인도 지지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문재인 국정수행에 가장 부정적이고, 국민의힘 지지도 높은 편이다. 무당층도 가장 많고, 지지 후보를 바꿀 의사가 가장 높다. 정치적 유동성이 높은 것이다.

최근 이재명은 한 청년이 인터넷에 올린 페미니즘 비판 글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돌렸다고 한다. 이 글을 보면 청년들의 불만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긴 해도) 결국은 문재인이 개혁 배신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 글은 급진 페미니즘이 청년들을 이간질할 뿐 아니라 청년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호도하는 효과를 낸다고 비판한다.

모든 남성이 여성 차별의 잠재적 가해자라는 식의 담론과 정책이 실제로는 여성들의 조건을 개선하지도 못하면서 여성에게는 헛된 거짓 위안(네 실패는 네



운동의 부양력이 지속적이지 못한 탓에 주류 정치가 왼쪽의 목소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의당을 포함한 좌파의 존재감이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탓이 아니라 남성 탓이야)을 주고, 남성들의 불만은 특권 세력의 반발이라는 식으로 치부하며 무마하는 압력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정부를 향한 진정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는 걸 방해한다.

물론 정의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늘어 왔다. 진보당도 올해 들어 정부와 민주당 비판을 늘어 왔다. 정부 탄압에 항의해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지지했다. 늦었지만 이런 행보는 다행이고 환영할 일이다. (한편, 연립정부 관련 심상정 후보의 발언은 자주 바뀌고 있지만,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을 연정론으로 압박하는 것으로만 들린다.)

그러나 이제 비판과 상징적인 상층 연대로는 부족하다. 일자리와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급진적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곧장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급진적 대안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하려면 그것을 실현할 만한 힘 있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현실 가능해 보이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 수 있다.

좌파의 존재감

안타깝게도 현 상황은 그 반대다. 대중 운동이 강력하지 못하고, 이를 일으켜야 할 좌파는 정치적으로는(노동조합 관료 기구 안에서와는 구분되게) 지리멸렬하다. 운동의 부양력이 전혀 지속적이지 못한 탓에 주류 정치가 왼쪽의 목소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의당을 포함한 좌파의 존재감이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예컨대, 민주노총이 10월 20일 하루 투쟁 집회,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지만, 부문적 · 경제적이고 일회성 집회다. 그다음 전국 집중 집회는 두 달 뒤 1월 중순이다. 기성 조직들에 제한된 이런 상징적 집회들이 띄엄띄엄 열리는 것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우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기업주들에 맞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택배, 건보콜센터 등등 일부 부분들에서 벌어진 진정한 전투들을 민주노총 전반의 실질적 연대 투쟁으로 보편화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일부 산별과 대형 노조는 자기 부문의 계획을 우선 시해 전국 집회에 기층 조합원들을 동원하지 않았다.

대다수 좌파들이 기후위기와 체제 전환을 강조하지만, 각자 선거 강령을 선전할 뿐, 정작 대중적이고 개방적인 기후 운동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대중의 사기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싸우겠다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이나 진보당(과 김재연 후보)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

노동계 단일 후보론(민중경선)도, 사회주의 후보론도 별로 힘을 못 받고 있다. 11월 10일 ‘사회주의 좌파 공투본’이 출범했지만, 한 달 전 공투본을 제안 · 호소한 5곳 단체에서 구성이 하나도 늘지 않았다. 민중경선론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될 확률은 낮다.

좌우로 눈치 보는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왼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좌우로 양팔 벌려’식 줄타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또다시 변화 염원 대중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재명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

급하자면서 경제부총리 홍남기를 공개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전국상공회의소 회장(이자 SK 회장) 최태원을 만나서는 “기업은 경제 그 자체”라며 친기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우파 기독교 단체들과 만나서는 우파와 합의해서(“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급진 페미니즘 정치를 비판하거나 그에 대한 청년들의 정당한 불만을 경청하는 것과, 우파에게 힘 실어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이재명이 좌파 눈치를 덜 보는 듯하니, 최근 기본소득당이 이재명을 “주류 정치에 타협[한다]”고 비판하며 독자출마를 선언했다.)

가장 좋은 것은 개방적이고 폭넓은 대중 운동이 일어나 좌파 정당과 좌파 정치인들에게 부양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운동이 확대되면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주류 정치권도 이런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역으로 운동 지지 대중의 의식과 자체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고 사기를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선거 후에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압력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대중 운동은 기존에 조직된 세력을 넘어서 개방적이고 비종파적이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시진핑의 ‘공동부유’와 ‘홍색 규제’ – 과연 진보일까?

11월 25일(목) 오후 8시

발제 이정구

한신대학교 강사, 중국경제 전문가, 노동자연대 창립

참가신청 bit.ly/meeting1125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링크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시진핑이 내세운 ‘공동부유’(함께 잘 살자)가 뜨거운 화두입니다. ‘홍색 규제’로 불리는 기업 규제 강화도 세계적 이목을 끌었죠. 최근 중국공산당 6중전회에서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다지면서 중국의 향방에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일각의 기대처럼 이제 중국은 경제성장 이면에서 극심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주의 본질’로 나아가는 걸까요? ‘공동부유’는 중국 인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까요? 시진핑은 왜 ‘공동부유’를 꺼내 들었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중국의 실제 현실은 어떤지 살펴해보려 합니다.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노동자연대TV 채널에서 지난 온라인 토론회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youtube.com/노동자연대TV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학교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간병 살인’ — 자본주의와 계급 불평등이 낳은 비극

전주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 방치해 사망케 한 22살 청년의 사연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극심한 가난과 실업, 간병 부담 속에서 청년은 홀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먹을 것도 없고, 휴대전화·전기·도시가스마저 끊어진 상황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아버지는 아들을 놓아주려고 곡기를 끊었다고 한다. 아들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버지를 방치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청년에게 존속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이해하나, “살해의 고의”가 있었으므로 “패륜적 범죄”라는 것이다.

비정하고 냉혹한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했다. ‘돌봄 의무를 방치한 죄는 청년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사회적 질타도 쏟아졌다. 심상정과 이재명 대선후보는 “돌봄 사각지대”를 꼬집으며 국가의 책임 방기를 문제삼았다.

‘간병 살인’은 간병과 돌봄 부담이 개별 가족에게 떠넘겨진 한국 사회의 열악한 복지 현실을 비극적으로 들춰낸다.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끝없는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환자와 가족은 자살과 살인 등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다.

간병 지옥

간병은 “전쟁” 또는 “지옥”으로 불릴 만큼 가족의 삶과 미래를 절망에 빠뜨린다.

우선 비용 부담이 심각하다.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루에 8만~1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오롯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간병인 고용시 월평균 부담액이 280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임금 근로자 월평균소득(세전 309만 원)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쏟아부어야 감당할 수 있는 액수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증·고령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더욱 늘어났다. 국내 간병인 종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족 이주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하루 간병비가 10만~15만 원으로 훌쩍 올랐다.

부자들에게 비싼 병원비와 간병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동자·서민층 가정은 직격탄을 맞는다. 간병·돌봄 문제가 계급 문제인 까닭이다.

노동자 등 서민은 집 팔고 빚을 내도 간병비·병원비·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간병 파산’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비싼 간병비를 감당 못하면, 환자 가족이 직접 돌보는 수밖에 없다. 현재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90퍼센트를 가족이 직접 돌보고 있다. 간병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둔 보호자는 14퍼센트, 근로시간을 줄인 비율은 33퍼센트에 달한다(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2018년



개별 가족에게 맡겨진 간병과 돌봄 부담

간병살인에 대한 조사, 시사기획).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이거나 노-노 간병(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인 경우는 더 크게 고통받는다.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이나 자폐증, 발달장애의 경우 장기 간병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기약 없는 간병은 가족의 몸과 마음까지 피폐하게 만든다. 헤어날 방도가 없는 경제적 압박감과 절망감 속에서 가족들은 수면 부족·우울증·정신 질환에 시달리며 골병 들기 일쑤다.

필름 개선 혹은 생색내기

문재인 정부는 당선할 때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약속하며 간병 지원책과 ‘국가치매책임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말만 요란했을 뿐, 필요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거나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하루 간병비 2만 원)가 적용되는 10만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했지

만,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 기준으로 6만 1352병상에 그쳤고, 지원 계획은 불투명하다. 애초 목표치가 필요한 간병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데도 말이다.

10만 병상 확보조차 이토록 지지부진한 이유는 민간 병원 중심 의료체계와 간호 인력 부족 탓이 크다. 최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일부 병원이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심사를 거쳐 경증 환자만 수용하고, 정부 지원금만 챙기는 일도 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입원 환자의 10~13퍼센트 정도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간호 인력 부족 문제 해결도 외면해 왔다.

정부의 간병·요양 서비스 중에는 노인장기요양제도도 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지원 대상 인정률이 10퍼센트 수준이다. 중증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돼 혜택도 제한적이다. 방문요양서비스는 하루에 2~4시간만 이용할 수 있기에 가족의 간병을 대체할 수 없다.

간병 부담을 덜어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 기관이고 시설이 열악하다.

민간 요양 기관은 수익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비싸거나 반대로 안전하고 질 좋은 간병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둘 중 하나다.

관찰은 시설을 갖춘 곳을 이용하려면 비용이 월 200~700만 원이나 된다. 동시에 부정 수급은 물론이고, 노인 학대 등 흉흉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의 장모가 1실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가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건이다. 요양병원 설립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 병원을 짓고 급여를 뒀다는 죄목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도 문제다. 50~60대 여성이 대부분인데, 보통 출퇴근 없이 주 6일 24시간 내내 일한다. 올해 간병노동자의 일급은 9만~11만 원 수준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4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부자들에게 비싼 병원비와 간병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동자·서민층 가정은 직격탄을 맞는다. 간병·돌봄 문제가 계급 문제인 까닭이다.

반면, 공공 요양 기관 비율은 2.2퍼센트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요양원(정원 150명)에 입소하려면 대기자가 많아 무려 9년을 기다려야 한다.

‘국가치매책임제’는 이름만 거창할 뿐, 주로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치매지원센터 증설 외에 크게 진척된 것이 없다.

간병·돌봄 복지 대폭 확대

한편, 국민의 힘 대선후보 윤석열은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몇 가지 생색내기 수준의 개선 조치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와 동시에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격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문재인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재정 지원도 턱없이 부족했다. 윤석열의 비판이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이다.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1심 유죄를 받은 후보가 국가의 급여 낭비 운운하는 것도 우습다.

반면, 이재명 대선후보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주장하며 ‘공공 의료 체계 및 노인 요양 기관 확충,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처우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시간 증대’ 등 유의미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관건은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기업주와 부자의 방해를 거슬러 얼마나 실질적인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 할지다. 최근 좌우 줄타기를 하면서 기업주들의 환심을 사려는 이재명의 행보는 이런 점에서 매우 의구심을 키운다.

간병은 개인이나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지배계급은 노동력으로서 쓸모가 없어져 착취가 불가능하거나 착취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집단(노인·장애인·중증 환자 등)에 투자할 열의가 없다. 보건·사회적 돌봄 복지를 늘리는 데 매우 인색할 뿐 아니라, 경제 위기 시기에는 알량한 복지도 후퇴시키려 한다.

‘간병 살인’을 없애려면 이윤 논리를 거슬러야 한다. 환자·노인·장애인 등 간병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국가가 지원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왕창 걷고 쓸데없는 군사비를 대폭 삭감해 간병과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아래로부터 투쟁이 필요한 이유다.



영화평 | 〈태일이〉 (2021년, 99분)



대학생이 본 〈태일이〉

전태일의 치열한 삶과 희생이 남긴 희망의 메시지

김태양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오는 12월 1일 애니메이션 영화 〈태일이〉가 개봉한다. 나는 지난 11일 사회에 참석해 이 영화를 일찍 볼 수 있었다.

어렸을 때 종종 가던 도서관의 어린이 코너에는 최호철 작가의 만화 〈태일이〉가 꽂혀 있었다.

만화 〈태일이〉는 전태일의 곤궁한 어린 시절부터 분신까지, 그의 굴곡진 삶 전체를 그린 작품이었다. 오래 전에 읽어서 자세한 내용까지 기억나지 않지만, 묘사가 매우 생생하고 흡입력이 넘쳐 여러 차례 읽었다.

하지만 마지막 권에는 손이 잘 가지 않았다. 결말이 너무 슬퍼서였다.

사실 결말만 슬픈 건 아니었다. 내가 보기에 전태일은 아버지의 강요로 학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어린 나이부터 굶은 일에 시달리고, 온갖 천대에 시달리다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인물이었다. 그의 성실하고 따뜻한 심성에서 비롯한 일화들은 그의 죽음을 더욱 비극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바뀐 건 대학교 1학년 《전태일 평전》을 읽었을 때였다. 전태일이 그냥 불쌍한 인물이 아니라,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치열하게 고민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영화 〈태일이〉도 주인공 태일의 의식이 고민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시대를 밝힌 등불 전태일

영화는 전태일이 평화시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에 집중한다.

기술을 배워 가족을 부양하려고 시작한 재단 일이지만, 태일은 동료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는 미싱사·시다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평화시장 전체의 노동조건에 주목하게 된다.

태일은 뜻이 맞는 재단사 친구들과 함께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일을 벌인다. 평화시장 대표는 태일과 그의 친구들을 달래는 척하면서 약속을 저버리고, 경찰이나 공무원들도 태일을 무시하고 욕박지른다. 마르크스가 노동자들의 의식이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봤듯이, 태일과 그의 친구들도 저항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발

전시킨다.

그리고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기로 한 날, 태일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다. 기업주와 정부를 믿을 수 없고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였다.

내 생각보다 영화 〈태일이〉는 밝은 분위기였다. 태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은, 쓰라린 좌절도 있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거듭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잘 묘사한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볼 가치가 있다.

영화를 보기 전이나 후에 《전태일 평전》이나 만화 〈태일이〉를 읽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작품들은 영화의 배경인 1960~1970년대 한국 사회나 전태일의 삶의 궤적 등을 폭넓고 생생하게 다룬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식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착취와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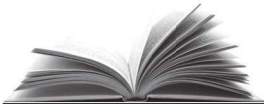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서평 | 《멈춰 선 여성해방 — 150년간 여성과 남성의 삶에 일어난 변화와 여전한 차별》

쉬우면서도 깊이있게 여성해방의 전망을 밝히다

이현주

우리 할머니 세대와 비교해 보면, 오늘날 여성의 삶은 많이 변했다.

이제 많은 젊은 여성들은 줄줄이 애 낳고 자기 삶을 포기한 채 평생 자식과 남편 뒷바라지하는 삶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런 변화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성 차별은 옛말이고 이제는 여성이 약자라는 인식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여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괜히 업살부리는 게 아니다.

분명, 어떤 여성들은 ‘유리천장’을 뚫고 사회의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대다수 여성들은 현상 유지를 위해 힘겹게 발버둥치고 있다.

고된 노동과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끝없는 집안일과 육아, 사고팔리는 여성의 성과 이미지, 외모 압박, 턱없이 낮은 강간 기소율 … 여성 삶의 많은 측면이 여전히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가리킨다.

코로나19는 노동계급 등 서민층 여성들의 처지를 더 악화시켰다.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이런 현실을 묵묵히 감내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여성들은 차별적 현실을 옹계 비판하면서도 그 원인으로는 남성 일반을 탓한다(급진 페미니즘).

그러나 차별에 맞서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개별 남성의 행동거지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두는 종류의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의식도 자라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것이 변했는데도 왜 여성은 여전히 차별받을까? 그냥 예전부터 그랬듯이 세상이 남성의 것이기 때문일까? 여성해방을 이루는 올바른 길은 무엇일까?**

이런 물음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서 매우 유용한 신간이 나왔다.

이 책의 저자인 린지 저먼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당원이었고, 20년 동안 혁명적 좌파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의 편집자였다. 그리고 여성해방·계급·개혁주의에 관해 많은 기사와 논문, 책을 썼다. 그의 책 중 《여성과 마르크스주의》(책갈피)와 《계급이란 무엇인가?: 갖가지 불평등의 원인을 이해하는 열쇠》(책갈피)는 한국에 번역·출간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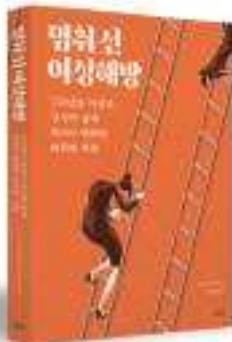
변화

이 책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최고는 여성 삶에 생긴 변화를 매우 생생하게, 그리고 광범한 **사회 변화의 맥락 속에서** 다룬다는 점이다.

저먼은 양차 세계대전, 전후 호황기의 복지 확대와 뒤이은 신자유주의적 긴축 같은 굵직한 사회 변화가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섹슈얼리티, 가족의 재편, 노동시장 내 지위와 구실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살펴본다. 사회 변화 속에서 개별 여성과 남성의 관계도 변화해 왔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들이 집 바깥에서 노동자로서 일하지만 흔히 적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를 감내해야 한다. 조만간 2차 파업에 돌입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삭발을 한 채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멈춰 선 여성해방
— 150년간 여성과 남성의 삶에 일어난 변화와 여전한 차별

린지 저먼 지음, 이장원 옮김.
책갈피, 340쪽, 17,000원

가령, 저먼은 영국에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풍토는 수세기에 걸쳐 확립된 전통이 아니라 19세기 말에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때 확립된 보수적 성 규범은 제2차세계대전과 전후 호황기, 1960년대에 벌어진 성 혁명과 사회혁명을 거치며 다시금 완전히 변화했다.

오늘날 현실을 묘사하는 부분은 영국을 중심으로 10여 년 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지금 한국의 현실과 너무 비슷해서 현실감이 돋는다.

특히 섹슈얼리티를 다룬 부분은 이 책의 백미라고 할 만하다. 섹슈얼리티 분석은 저먼의 이전 저작인 《여성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최근 20~30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발전한 성 상품화 현실을 고려해 새롭게 넣은 것이다.

또, 저먼은 이런 변화가 남성의 처지

와 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한 장(章)을 할애해 다루는데, 이 부분은 오늘날 한국 남성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저먼이 설명하는 이런 변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개인이 가진 생각이나 개인적 관계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차별에 대한 흔한 관점, 즉 차별을 단지 개인의 잘못된 태도나 습관, 편견, 심리에서 비롯한 것처럼 설명하는 접근법의 한계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무엇보다 여성의 조건을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작동 방식과 연결지어 보는 것은 오늘날에도 왜 여성 차별이 지속되는지를 이해하고 해방의 전망을 찾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저먼은 여성해방의 가능성이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계급사회가 가하는 한계**때문에 그 가능성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점을 설득적으로 보여 준다.

“여성해방운동의 요구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거둬 계급사회의 한계에 맞닥뜨렸다. 그 근원에는 무상 보육이나 동일 임금 같은 평등 요구와, 그런 요구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용자와 정부 사이의 충돌이 있었다.

“노동할 권리는 곧 남성과 똑같이 착취당할 권리가 돼 버렸다. 게다가 여성은 돈도 더 적게 받는다. 성적 자유를 누릴 권리는 곧 랩댄스 클럽이나 잡지 표지 등을 통해 여성의 몸을 판매할 권리가 돼 버렸다. 개별 남성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이 책은 1960년대 후반부터 벌어져 급진 페미니즘의 형성에 밑거름을 제공한 여성해방운동의 경험도 깊이 살

펴본다.

이 운동은 위대한 공민권운동과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의 경험 속에서 발견한 사회변혁의 전망을 여성해방에도 적용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애초에 목표로 했던 것들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다.

이 운동은 사회변혁의 전망을 잃어버린 채, 기존 사회질서 속에서 여성이 더 잘 대표되도록 매진하는 한편, 정제성 정치로 후퇴해 개인주의화되고 파편화됐다.

저먼은 이런 실패가 페미니즘의 근본적 약점, 즉 여성 차별을 낳는 근원인 계급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점을, 그 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살펴보면서 짚어낸다.

한국 여성운동의 주류가 미국 제2물결 페미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런 역사를 통해 곱씹어 볼 점이 많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여성해방을 명분으로 중동에서 전쟁을 벌인 미국의 제국주의적 위선과 그 전쟁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그곳 여성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본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약점, 그리고 하잡 착용 금지 논란 등의 쟁점도 다룬다.

최근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국면에서도 서구의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여성의 권리 확장에 도움을 준 것처럼 호도했다.

한국에서도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가정을 사실상 받아들이거나, 아프간 여성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무르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기대를 걸었다.

이 책은 이런 관점이 왜 문제이고, 중동 여성의 해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제공한다.

잇힌 이름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은 남녀 사회주의자들이 여성해방 사상과 운동에 기여한 경험을 소개한다는 점이다. 여성 참정권 운동을 벌인 서프러제트나 여러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여성해방에 기여했다고는 잘 알려져 있지만, 사회주의자들의 기여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은 마르크스와 엥겔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클라라 체트킨, 실비아 팬크허스트 등 여성해방 사상과 운동에 기여한 사회주의자들을 소개하며, 사회주의자들(여성뿐 아니라 남성도)은 누구보다, 때로 일부 페미니스트보다도 더 일관되게 여성의 권리를 옹호했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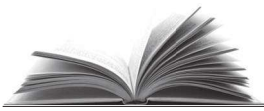
또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은, “여성 문제”란 무엇이며 해방을 쟁취하려면 무엇을 목표로 어떤 세력과 연대할지를 둘러싼 논쟁을 늘 수반했음도 보여 준다. 서프러제트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팬크허스크가(家) 여성들 사이의 갈등은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저먼은 이런 점을 통해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연결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150년 역사의 여러 측면을 분석적으로 다루지만, 흥미롭고 풍부한 사례들로 쉽고 재미있게 읽힌다. 딱딱하지 않고 쉽고 자연스러운 번역도 읽는 재미를 더하는 요소다.

여성 차별에 맞서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한다. 특히 여성 차별 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글이 너무 개인적이고 표면적인 문제에만 머물러 부족함을 크게 느끼는 이들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 보길 바란다.

이 책은 시야를 더 넓고 깊게 해주며 여성해방의 급진적 대안을 추구하는 독자들에게는 속 시원한 청량감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서평 | 《아이폰을 위해 죽다 — 애플, 폭스콘, 그리고 중국 노동자의 삶》

애플과 중국 정부가 만든 ‘죽음의 공장’, 그리고 저항

박해신

최근 출판된 《아이폰을 위해 죽다》는 아이폰 제작사 애플을 최대 고객으로 두는 폭스콘 공장의 노동자들을 조명한 책이다. 소재는 ‘애플’과 ‘폭스콘’이지만, 중국의 많은 노동자와 청년이 처한 불평등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새 세대 농민공의 삶, 엄청난 이득을 챙긴 기업들의 위선, 높은 노동강도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청년·학생, 이들의 좌절된 꿈과 희망, 그리고 저항까지 고루 다룬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한국 얘기야, 중국 얘기야?’ 하고 헛갈릴 정도로 놀랍게 비슷한 사회의 동학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간접 경험하고, 이들의 저항에 연대하고자 하는 청년·노동자라면 일독을 권한다.

“운명 공동체”?

‘폭스콘(Foxconn)’이라는 이름은 여우(Fox) 같은 속도로 커넥터를 생산하겠다는 회사의 목표가 반영된 이름이다. 폭스콘은 중국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고용해 수십 곳에서 공장을 운영한다. 중국 정부는 폭스콘을 강력히 지원해 왔다.

애플과 폭스콘은 마냥 긴밀한 관계는 아니었다. “애플은 폭스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폭스콘은 비용, 속도, 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타기업과 경쟁하며, 노동자들을 잘 쥐어짜는 걸 인정받아 지금의 자리를 지켜 왔다.

폭스콘은 신입 직원들에게 “여러분의 새로운 꿈을 향해 서두르”라며 개인의 노력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낙관을 심어 줬다. 그러나 “일터와 일상 공간은 24시간 내내 고속 생산을 할 수 있는” “노동력” “보관” 소였다.

폭스콘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강력한 규율로 통제해 왔다. 노동자들이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기숙사 방을 다른 부서, 다른 교대조, 저마다 다른 방언을 쓰는 사람들로 묶어 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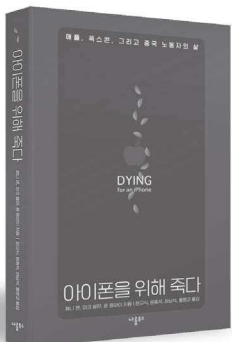
그리고 “철저한 보안 조치는 자사의 저작권 보호, 제품 손실 방지, 대량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비밀 엄수라는 애플의 우려로” 더욱 강화됐다.

레이저 납땜을 하는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교대시간 전에 호루라기가 3번 울려요. 첫 번째 호루라기가 울리면 일어나서 의자를 정돈 … 두 번째엔 작업 준비를 하고 … 세 번째 호루라기가 울리면 앉아서 작업을 시작하죠.” 또, “10분 이상 화장실에 가면 구두 경고를 받고, 근무시간에 잠담하면 서면 경고를 받는다.” 한 여성 노동자는 손톱이 길어 벌점을 받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을 “케이블에



‘혁신의 아이폰’? 현실은 살인적 ‘착취의 아이폰’ 2011년 10월 중국, 애플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



아이폰을 위해 죽다 — 애플, 폭스콘, 그리고 중국 노동자의 삶

제니 첸, 마크 셴던 펴낸아이 지음
정규식·윤종석·하남석·홍명교 옮김.
나뭇잎스, 410쪽, 18,000원

감긴 생산라인의 톱니바퀴”로 묘사한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기계를 조작하는 동안 기계도 나를 조작하는 것 같아요.”

폭스콘의 이윤 추구는 노동자들의 건강도 위협했다. 가령, 알루미늄 원료로 아이패드 케이스를 만들 때 발생하는 분진은 노동자들의 호흡기와 피부에 닿으면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 장구는 제공되지 않았다. 2011년 상하이의 한 공장에서는 가연성 알루미늄 분진이 폭

발을 일으켜 노동자 61명이 다치고 일부는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신세대 농민공이다. 부모 세대가 도시로 이주해서 일해 번 돈으로 자라,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농민공이다. 이들에게 유일한 미래의 희망은 도시로 가는 것이었다.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일하고, 꿈과 희망을 좇아 입사했지만 작은 유대감조차 형성할 수 없었던 젊은 노동자들은 자살로 내몰렸다. 2010년 12월까지 폭스콘 시설에서 노동자 18명이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노동자 자살이 빈발”했던 이때 “폭스콘은 처음으로 100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섯 번째 팔다리”가 된 스마트폰을 만든 노동자들은 수도 없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 애플과 폭스콘은 이들의 고혈을 빨아 먹으며 어마어마하게 부를 늘린 것이다.

사측은 판매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압박 속에 “유연한 고용”을 더 늘렸다. 공장의 일부가 자동화됐고 일부 정규직 직원이 학생 인턴과 하청 노동자로 대체됐다.

폭스콘과 폭스콘의 노동자들은 “운명 공동체”가 전혀 아니었다. 기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노동자들은 더 고통받았다.

중국 정부와 폭스콘의 유착

학생 인턴들은 폭스콘의 “새로운 피”다. 중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숙련 노동자들이 많이 부족해지자 국가 발전 우선순위에서 기술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

지방정부들은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그 기준에 맞는 학교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기업들은 이 직업교육과 연동돼 있는 인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부릴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이 과정에서 교사들을 상담사이자 관리자로 배치해 회사에 이롭게 활용한다. 한국의 특성화고 출신 청년 노동자들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이런 사례들은 중국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강하게 유착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은 “개혁파”들이 “마오주의의 연속혁명과 계급투쟁 개념을 거부”해서 이러한 불평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물론 마오쩌둥 사후에 이뤄진 중국 정부의 시장 개방·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후원 등이 불평등을 증대시킨 것은 맞다. 그러나 마오쩌둥의 중국도 결코 불평등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마오쩌둥 시기 중국은 후발 산업 국

가로서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강력한 국가 주도 성장을 추진했다. 이 목표를 위해 다른 국가, 자본과 경쟁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마오쩌둥 하의 중국 사회도 시장 개방 수준은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오늘날의 중국과 다르지 않은 국가 자본주의 사회였다.

중국 정부는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 때 경기 회복을 위해 시장에 돈을 풀고, 부동산 개발을 촉진했다. 노동자들의 필요는 우선되지 않았다.

“2011년 … 폭스콘의 대규모 공장이 위치한 톈화구로부터 홍콩의 북부 경계까지 교통망이 확대됐다. …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잇따라 승인되면서 … 임대료는 새로운 정점으로 치달았고, 토지와 부동산 가격 또한 치솟았다.”

바로 이때 폭스콘과 지방정부가 폭스콘 노동자들의 연이은 자살을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이들이 뛰어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창살”과 “그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살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지우”는 자살 금지 서약서, 상담 서비스였다.

절망적인 현실 그리고 저항

이처럼 젊은 노동자들이 상경할 때 품었던 희망찬 미래가 현실에서 무너지는 과정은 참혹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저항했다. 특히 사측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거나 휴가철 주문 폭주 상황에서 노동강도를 강화한 것에 항의해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자신들의 힘을 보여 줄 수 있는 타이밍에 용감하게 결단을 내린 것이다. 물론 사측의 공격과 보복으로 실패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2010년 이후 최근 10년간 급속한 사업 성장으로 회사의 수익이 두 배로 증가하는 동안 폭스콘 노동자들은 더 높은 생산성과 이윤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유연 노동’ 고용 형태로 전환[됐고,] 노동자들은 이러한 탄압에 맞서 계속 집결했다.”

‘중국노동회보’에 따르면 중국의 시진핑 집권 초기인 2013년부터 5년간 “8696건의 집단적 노동시위가 발생”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상시적 검열 탓에 이 수치가 “모든 노동자 집단행동의 약 5~10퍼센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은 미·중 갈등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중국 내외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 탓에, 확산되던 노동자 투쟁과 이에 대한 연대가 잠시 주춤한 듯하다. 그러나 그 불만은 분명 물밑에서 끓고 있을 것이다.



“기후 변화 아닌, 체제 변화!”는 단지 구호가 아니다

재앙을 몰고 올 기후 변화를 피하려면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다른 종류의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 주말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 항의 시위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이에 동의할 것이다.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라는 구호는 최근 몇 년 사이 열린 기후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 중 하나가 됐다.

이 구호(와 구호에 깔린 사상)가 인기를 얻은 것은 기후 운동 내에서 좌파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기후 운동의 급진화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증거는 많은 기성 세력들이 거리 운동의 언어를 베끼고 있다는 것이다.

NGO들, 심지어 몇몇 정치인들도 급진적으로 들리는 언사를 갈수록 많이 하고 있다.

COP26에 참가한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청년들에게 기후 변화에 “계속 분노하라”고 했다.

하지만 오바마의 결론은 그다지 급진적이지 않다. “순수성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라. “목숨이 걸린 일인 것처럼 투표하라.”

그런 발언들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오바마와 NGO들의 메시지는 운동이 기존 체제 내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정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체제 변화를 체제 개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체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해야 한다는 호소다.

지난주 COP26 항의 시위에서는 사회주의자, ‘멸종 반란’ 활동가, 노동당 지지자, 녹색당 지지자, 노동조합 활동

가 등이 여러 NGO들과 함께 행진했다. 시위에는 특정 단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단결된 행동은 강력하다. 하지만 운동의 활력을 그저 찬양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운동 안에서 사상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11월 6일 시위 이후, COP26연합[COP26 대응 행동을 위해 결성된 연대체]이 주최한 ‘COP26 민중 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체제 변화”가 뜻하는 바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몇몇 발언자들에게 그 말은 기업·정부와 협력해 노동자들에게 더 친환경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뜻이었다.

또 다른 발언자들에게는 현 체제의 틀 안에서 ‘그린 뉴딜’을 하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재앙으로 떠미는 기업주들의 그칠 줄 모르는 이윤 물이에 도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저술가 안드레아스 말름의 말처럼, “지배계급이 그 본질상 재앙을 가속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자신의 본질에서 비롯한 충동에 따라 자신해서 파멸로 향하는 불길을 일으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체제 변화”는 지구를 파괴하는 화석연료 자본주의를 끝장내자는 호소다.

“기후 변화가 아닌 체제 변화”라는 구호는, 자본주의를 철폐해야 하고 그러려면 혁명이 필요하다는 의미여야 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80호 번역 김준호



11월 6일 기후정의 세계 공동행동 서울 집회 기후 위기를 멈추려면 자본주의를 끝내야 한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실패 체제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소피 스콰이어

11월 13일에 끝난 글래스고 COP26은 인류를 구할 해법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이렇게 말했다. “COP26 결과를 두고 ‘좋은 결과’, ‘진전’, ‘희망적’, ‘올바른 방향을 향한 진일보’라고 하는 ‘그린워싱’의 쓰나미와 언론의 왜곡을 경계하라.

“회의 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떠벌떠벌 헛소리’다. 진정한 과업은 회의장 밖에서 계속된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주류 언론들은 COP26 의장 알로르 샤프마가 눈물을 삼키며 한 구차한 연설을 보도했다. 샤프마는 COP26에서 전반적으로 삭감된 합의안이 나온 것에 유감을 표하는 말을 했다.

“총회 진행 과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실망이 큰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적하셨듯 이 합의안을 지켜낸 것 또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샤프마가 진짜로 불안해 하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COP26의 본질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탄소 포집 기술이나 ‘넷제로’ 정책 등으로] “상쇄되지 않는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문구가 중국·인도 정부의 압력으로 “단계적 감축”으로 후퇴했다.

기가 막힌 결정이다. 더 큰 문제는, 석유·천연가스 사용에 관해서는 단계적 중단은커녕 단계적 감축의 필요성조

차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면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나라들과 다국적 석유 기업들이 반발했을 것이다.

오히려 선언문에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만 있다. 무엇이 비효율적인지는 누가 결정할 것인가? 기업 이사회에 앉은 자들의 뇌물과 압력에 휘둘리는 자본주의 정치인들이 결정할 것이다.

허둥지둥

게다가 석탄에 관한 후퇴한 합의안은 총회 막바지에 미국·유럽연합·중국·인도 대표단끼리 허둥지둥 합의한 결과였다. 수십억 명을 대표하는 다른 정부 대표들과는 전혀 상의되지 않았다.

미국 기후 특사 존 케리는 최종 합의문을 지지하며 이렇게 말했다.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려면 먼저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COP26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게 해야 한다는 “1.5도 상한을 고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든 정부들이 공언대로 2030년까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 해도 지구 평균 기온은 2.4도 오를 것이다. 지금처럼 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7도 오를 것이다.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 디터 헬름은 이렇게 말했다. “COP26의 목표가 1.5도 상한을 유지하는 것이었다면, 그 목표는 폐기됐다.”

COP26에서는 부국들이 빈국들

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린다는 결의가 나왔다.

하지만, 이미 기후 재앙에 시달리는 빈국의 활동가들은 그 돈이 실제 필요한 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 활동가들이 부국들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

부국들은 2020년까지 빈국들에 기후변화 적응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COP26을 이끄는 책임을 맡은 영국 보수당 정치인들은 도로를 증설하고, 석유·천연가스 기업을 지원하고, 최근에는 단거리 항공업 육성 예산을 책정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모든 면에서 노동계급 사람들의 적이다.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쟁취하려면 체제 옹호자들에게 모종의 협력을 구하려 애쓸 것이 아니라 현 자본주의 체제에 끈질기게 맞서야 한다.

자본 축적을 집행하는 자들의 손에 기후 대응을 내맡겨 뒤편가는 가장 기초적인 조처조차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글래스고 COP26 기간에 이론 진정한 성취는 지역 수준에서든 세계적 수준에서든 거리운동을 부활시킨 것이다.

11월 13일 런던을 마비시킨 ‘멸종 반란’ 행동은 정치인들이 세계 압도 다수 사람들에게 안겨 준 모욕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었다. 하지만 투쟁은 더 심화돼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노동계급의 힘에 기반한 대중적·전투적·혁명적 세력이 필요하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81호 번역 김준호



기후위기, 불평등, 재앙 마르크스주의적 대안

장호중, 마틴 엠스 외 지음, 책갈피, 624쪽, 24,000원

새로
나왔습니다



COP26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마틴 엠스 지음 | 김준호 옮김
노동자연대 | 3,000원



소책자 구입
바로가기



전면 개정판 뽀빠이들을 위한 환경 가이드 마르크스와 반자본주의 생태학

마틴 엠스 지음 | 김준호 옮김
노동자연대 | 3,000원

※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